

〈IPUS 신년 간담회〉

2015년 북한 신년사 분석과 남북관계 전망

- 일시 2015. 1. 5(월) 오전 11시
- 장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세미나실(73동 209호)

사회	박명규 (IPUS 원장)
총론	김병로 (IPUS HK교수)
정치 · 대남대외	장용석 (IPUS 선임연구원)
경제 · 사회	정은미 (IPUS 선임연구원)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최후승리’를 향하여

김정은 시대 브랜딩을 위한 경제 · 통일고지 점령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1. 6대 강국, 4대 전환, 2대 구호

○ 2015년 북한의 신년사에 나타난 올 한해 정책 목표와 방향은 6대 강국, 4대 전환, 2대 구호로 요약할 수 있다. 6대 강국이란 사상, 군사, 경제, 인재, 체육, 통일에 서 강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며, 그것은 다시 4대 전환으로 요약된다. 즉 ‘혁명무력건설과 국방력 강화’, ‘인민군대 후방사업’, ‘인민생활과 경제강국 건설’, ‘남북관계’에서 대전환을 가져오겠다는 것이다. 이 과제는 다시 2개의 구호로 압축된다.

하나는 “모두 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 나서자!”라는 구호다. 다른 하나는 “조국해방 일흔뚝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이다. 전자는 당 창건 70년이 되는 올 10월까지 붙들어야 할 ‘교시’이며, 후자는 광복 70년을 맞아 올 한해 남북관계에서 견지해야 할 ‘말씀’이다.

구호는 북한에서 지도자의 통치철학을 대중에게 쉽게 전달하는 수단이다. 인민들은 당과 지도자가 내려주는 구호를 붙들고 위기와 고난을 견디며 미래를 희망한다. 따라서 구호를 잘 만드는 일은 지도자의 첫째가는 중요한 조건이라고 북한의 주체사상은 규정하고 있다. 원래 북한의 신년사는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그 해의 구호를 하나씩 제시하는데, 올해는 광복 70년과 당 창건 70년을 한꺼번에 맞는 중요한 해인 만큼 구호를 두 개나 제시했다.

2. 구호 하나, ‘최후승리를 향한 총공격전’ - “인민생활 향상과 경제강국 건설에서의 전환”

○ 올해 신년사에서 두드러진 키워드는 ‘최후승리를 향한 총공격전’이다. ‘최후승리’라는 표현이 독특한데 북한 신년사에 자주 등장하는 말은 아니다. 북한에서 시장개혁이 한창 진행 중이던 2000년대 초 김정일 위원장이 공동사설에서 사용했던 표현이고,

‘강성대국의 문’을 목전에 두었던 2011년, 그리고 ‘경제강국 건설’을 구호로 내걸었던 2013년에 사용했다.¹⁾ 주로 경제발전과 관련하여 이 구호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집권 첫해인 2012년 태양절 100주년 연설에서 “다시는 인민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도록 하겠다”며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라는 구호를 사용했다. 따라서 이번 신년사의 ‘최후승리’ 구호는 경제고지 점령이 목전에 왔음을 의미한다.

경제는 김정은 시대를 브랜딩할 수 있는 정책이다. ‘사상강국’은 김일성 주석의 몫으로, ‘군사강국’은 김정일 위원장의 공으로 돌린다면 김정은의 치적은 경제, 인재, 체육, 통일 강국건설이 될 것이다. 그 중에서 당연히 ‘경제강국’이 우선이다. 북한이 지난해에 이룩한 경제업적을 TV로 소개하는 부분에서 농장과 어획한 물고기, 석탄생산, 도로건설과 위성과학자 주택과 김책공대 교육자 주택, 과학자휴양소, 10월 8일공장 등 각종 건설사업을 사진화면으로 클로즈업함으로써 대형 건설 사업을 김정은 시대의 아이콘으로 강렬하게 각인시켰다. 이러한 대형 건설 사업이 군민협동으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지난해 아시안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체육경기 화면으로 분위기를 띄우며 김정은 시대를 브랜딩하는데 동원하였다.

물론 김정은 정권이 공식적으로 내걸고 있는 정책기조는 ‘병진노선’이다. 경제건설과 핵무기 개발을 병행한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병진노선’을 견지하는 이유는 “사회주의 제도를 압살하려는 적들의 책동”이 있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방어적 입장을 피력했다. 군력강화에 대해서도 ‘경량화, 무인화, 지능화, 정밀화’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하던 작년과 달리 ‘최첨단무기개발’, ‘당이 제시한 군력강화의 4대전략과 3대과업’ 등으로 우회적 표현을 선택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방력 강화의 상당 부분이 ‘인민군대 후방사업’에서 획기적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어서 결국 국방력 강화도 군대의 의식주 문제 해결, 즉 경제와 맞닿아 있다. 이런 점에서 김정은 정권이 광복 70주년, 당창건 70주년에 목표로 삼고 있는 ‘최후승리’는 실질적으로 경제고지 점령이라 할 수 있다.

3. 구호 둘, ‘자주통일의 대통로’ - “남북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변혁”

○ 다른 하나의 구호는 “조국해방 70돌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는 것이다. “북남 사이의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하여 끊어진 민족적 유대와 혈맥을 잇고 남북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중단된 ‘고위급접촉’도 재개할 수 있고 ‘부문별 회담’도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최고위급 회담’도 할 수 있다며 정상회담까지 언급하였다. 지난해 12월 29일 1월 중으로 대화를 하자는 남한정부의 대북제의에 북

1) ‘최후승리’는 1999년과 2000년, 2002~2004년, 2008년과 2011년, 2013년에 각각 사용되었다.

한이 신년사를 통해 화답을 한 셈이어서 모양새가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다.

북한으로서는 올해 남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신년사에서 ‘통일’을 18회나 언급하며 남북관계의 대전환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남한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지원만이 아니라 평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서 남한의 지원이 시급하다. 북한으로서는 경제강국 건설에서 최대의 걸림돌이 바로 미국과 유엔의 경제군사 제재이며 최근 심각해진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압박이다. 이러한 난국을 한꺼번에 타결할 방법이 남한의 협력을 받는 것이다. 남한과 대화 통로를 열면 경제군사 제재도 무력화할 수 있고 인권압박에서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통일의 대통로’를 열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대규모 전쟁연습’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어서 대화의 실질적 진전은 쉽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상대방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이 벌어지는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신의 있는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고 북남관계가 전진할 수 없다”며 잘라 말하고 있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일준비’와 인권정책에 대해서도 “제도통일을 추구하지 말아야 하며 상대방의 체제를 모독하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동쪽을 모해하는 불순한 청탁놀음을 그만두어야” 한다며 맹비난하였다. 통일준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통일헌장’에 대해서도 이미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이 있으므로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한정부는 대화를 무조건 수용하고 통일을 실현하겠다고 장담하고 있으나, 북핵문제와 인권문제, 한미연합군사훈련 문제 등에 대해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지 않으면 남북관계 개선은 어려울 것이다.

4. 경제강국과 통일 대통로, 두 고지를 넘으려면

○ 최후 고지인 ‘10월의 대축전장’에 “자랑찬 선물 안고 떳떳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경제와 통일 두 고지를 점령해야 한다. 그러나 위에 언급했듯이 통일을 18회나 언급하며 남북관계의 대전환과 대변혁을 요구하고 있지만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다. 미국에 대해서도 ‘대담한 정책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역시 기대 난망이다. 작금의 현실은 남한의 지원과 미국의 정책전환만 기대하다가는 ‘10월의 대축전장’에 빈 깡통을 들고 들어갈 수도 있다. 그렇다면 ‘10월의 대축전장’에 무엇을 들고 갈 것인가? 이것이 신년사가 묻는 말이고 2015년 북한이 당면한 과제다.

핵무기는 국가의 자존심을 높여주었지만 그것만으로 축제를 즐길 수는 없다. 인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제성과가 있어야 한다. 경제성과를 획기적으로 확보하려면 무역을 증대하고 외자를 유치해야 한다. 북한이 4개의 경제특구와 19개의 경제개발구를 설치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일 것이다. 이번 신년사에서도 “대외경제 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며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들을 비롯한 경제개발구 개발사업을 적

극 밀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국제적 고립과 압박에 직면한 북한은 남한의 경제지원이 없이는 개발구의 성공이 불투명하며 러시아와 중국 외에는 투자나 지원 전망이 밝지 않다.

이처럼 불리한 외부환경을 타개할 묘책은 ‘절약과 동원’으로 버티는 방법 외에 경제관리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과학기술 개발을 통해 생산력을 증대하는 것뿐이다. 대규모 자본투입이 없이 생산력을 증대하려면 시장개혁을 추진하고 기술개발에 투자해야 한다. 이미 포전 담당제와 기업의 자율성을 허용한 ‘6.28방침’, ‘5.30조치’로 식량과 상품의 증산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전력과 비료 생산에서도 기술개발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올해에 먹거리 해결의 3대 축으로 제시된 농산, 축산, 수산, 그리고 금속, 화학, 석탄 등 여러 부문에서 기술개발에 진전을 이룩하면 희망은 있다.

5. 경제개혁과 관계개선으로 통 큰 리더십 발휘해야

○ 이번 신년사는 김정은이 선대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 통치의 주체로서 자리매김하는 자리였다. 김일성과 김정일 이름 대신 수령과 장군으로 호칭하고 지난 몇 년간 사용하던 ‘김일성-김정일주의’도 생략하여 신년사 전반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이름을 거의 빌려오지 않았다. 문수물놀이장과 미림승마장, 각종 주택건설 사업은 이미 김정은의 치적이 되었다. 이러한 추세라면 김정은의 이름으로 ‘10월의 대축전’을 성황리에 치르고 7차 당대회의 장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²⁾

그러나 진정한 ‘최후승리의 대축전장’을 만들려면 대담한 경제개혁과 적극적인 남북 교류로 보다 통 큰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전민과학기술화’와 체육 등 인적 자원에 의존하는 정책을 넘어 과감한 경제개혁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흡수통일’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남북교류와 인적 접촉에 적극 나서야 한다. 광복 70년을 맞는 올해 남북모두 관계개선과 통일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이러한 역사적 계기에 남북 대화와 교류가 시작되고 북한에서 의미 있는 경제개혁이 이루어짐으로써 남북이 모두 ‘최후승리’를 만끽하는 대축제의 장이 활짝 열리기를 기대한다.

2) 당규약에 의하면 당대회의 주요한 목적 중 하나는 당총비서를 추대하는 일이다. 북한의 헌법에 김일성은 영원한 주석으로, 김정일은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으므로 7차 당대회는 현재 노동당 제1비서인 김정은을 당총비서로 추대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당대회 개최는 6개월 전에 공지하게 되어 있으므로 적어도 4월 초 이전에 공지해야 한다.

2015년 북한정세 및 남북관계 관찰 포인트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1. 북한 내부 정세: 자주·존엄·선군·사상·자립 vs 인민생활향상·경제개발구 ⇒ 애국심

- 정치분야: 자주·존엄·선군, 수령님과 장군님 유훈관철 위한 충정·순결·도덕의리심 (혁명전통, 백두의 칼바람정신, 주체혁명위업), 인민대중제일주의, 애국충정-조선 민족제일주의, (군과 내각에 대한)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 사상사업 (위대성 교양, 김정일 애국주의 교양, 신념교양-사회주의,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 10월 대축전장(당 창건 70주년)
 - 정권 정당화 요소: ①자주·존엄·선군(핵과 국방, 전략적 요충지론) ②인민대중제일주의-인민생활향상(먹는 문제 해결과 식생활 수준 향상) ③선대 전통·유업 계승(항일-반제-백두, 선군, 통일) ④우리식 사회주의(국가소유제) ⑤애국주의-사회주의 문명국(체육, 전민과학기술인재), ⑥반제국주의(대미 긴장, 적대시정책 배경) ⑦자주 통일(대남 긴장, 통일유훈, 우리민족끼리)
- 군사분야: 당의 유일적 영군체계 확립, 당이 제시한 4대 전략적 노선과 3대 과업 관철, 전투정치훈련 강화(형식주의와 고정격식화 배경), 인민군대 후방사업 전환, 군의 당 사상관철전과 정책옹위전 선구자·본보기화
 - 조선인민내무군: 수령보위, 제도보위, 인민보위 칼 날카롭게 베틀 것
 - 로농적위대와 붉은청년군위대: 전민항전 준비 튼튼히 갖추어 것
 - 국방공업: 병진노선 관철, 군수생산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 우리식의 위력한 최첨단 무장장비 더욱 완성(* 2014년 “경량화, 무인화, 지능화, 정밀화된 우리식의 현대적 무장장비들을 더 많이 만들어야”)
 - 김정은 제1위원장: “다음 해는 훈련의 질을 높이는 해, 전군이 싸움준비완성에서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는 해, 그 어떤 강적도 단매에 때려 부실 수 있는 무적 필승의 최정예전투대오로 더욱 역세계 준비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해로 되게 하여야”(2014.12.5. 노동신문, 황해도 정찰총국 산하부대 시찰 때 언급)
- 경제분야: 과학기술(사회주의 경제강국과 문명국 건설/경제발전, 국방력강화, 인민생활

향상), 자립경제토대와 잠재력 최대 발동(우리 기술, 우리 자원, 수입병(輸入病) 척결, 원료·자재·설비 국산화)

- 농산·축산·수산: 먹는 문제 해결, 식생활 수준 한 단계 제고, 물 절약형 농법과 영농물자보장, 생산조직과 지도 실정에 맞게 추진 (농업제도 개혁?)
- 경공업: 중앙과 지방경공업공장 생산정상화, 소비품·학용품·어린이식품 (현대화 언급 없음, * 2014년 “경공업공장들에서 현대화, CNC화를 적극 다그치고”),
- 중공업: 전력문제 해결 강조, 4대 선행부문 발전(현대화 언급 없음, * 2014년 “주체화, 현대화의 구호를 높이 들고”)
- 대외경제관계: 다각적 발전,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등 경제개발구 적극 추진
- 건설: 조선속도창조, 청천강 계단식발전소, 고산과수농장, 미래과학자거리, 10월의 대축전장 빛나게 장식
- 임업: 산림복구전투, 수림화·원림화·과수원화, 평양시, 도·시·군소재지, 일터와 마을들을 보다 문명하게 꾸리고 정상 유지·관리

- 기업운영: 경영전략·기업전략 바로 세울 것, 예비와 잠재력 동원 증산, 제품 질과 경쟁력 제고, 전형 단위 따라 배우기
- 경제개혁: 내각을 비롯한 국가경제지도기관들에서 현실적 요구에 맞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확립, 모든 경제기관·기업체들이 기업활동을 주동적·창발적으로 수행, “각급 당조직들에서 경제관리방법을 개선하는 사업이 당의 의도에 맞게 진행되도록 당적으로 강하게 밀어주어야”(당의 개입·간섭·이권 강화? 개혁 역행?)

⇒ ①체감경기 진작 위한 전시성 사업과 수입의존 소비재 공급증대에 주력, ②설비 투자 부족 심화(경공업-민간자본 활용? 중공업 투자 부진 심화=투자 효율성은 증가?) 따라서 최근 북한경제 개선 현상은 ③일시적 경기호전이나 체감경기 개선 수준, ④중장기 성장동력 강화나 상위단계 도약 시도로 보기는 곤란³⁾

○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 새 세기 교육혁명,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인재강국화 실현, 체육강국 건설, 시대적 명작 창작, 위생방역과 치료예방사업 개선, 의약품 증산, 전국가적·전민애국적 사업으로 민족유산보호사업 전개

○ 이러한 과제들을 달성하기 위해 “항일혁명 열사들의 필승의 신념과 불굴의 기개, 우리 것을 귀중히 여기고 빛내는 애국 헌신의 기풍, 조선민족제일주의, 내 나라, 내 조국의 존엄을 떨치고 부강번영을 앞당기는 참다운 애국, 높은 민족적 자존심 지니고 우리의 힘과 기술·자원에 의거하여 모든 것을 우리 식으로 창조하고 발전, 숭고한 애국

3) 민준규·정승호,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 추진 현황 및 평가: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중심으로,” BOK 이슈노트 제2014-16호 (2014.12.22.), pp. 12-14 참조.

관과 헌신의 각오, 당 노선과 정책의 무조건 결사관철” 등 애국심 강조

- * “일군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사업을 당과 국가 앞에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패배주의, 보신주의, 요령주의를 철저히 없애고 모든 일을 혁신적으로, 과학적으로 전개해나가야” 한다며 지휘성원(일군) 독려 (기술관료의 합리성 증대?)

2. 대남관계: 정상회담 가능 vs 통일논의 거부, “자주권과 존엄 침해 단호히 대응·징벌”

- 남북관계 개선 필요성 인식: 조국해방 70돌, 외세에 의한 분열 70년, 수령님·장군님 필생 염원이며 민족 최대 숙원인 조국통일, 존엄 높고 부흥하는 통일강국, 우리민족끼리, 자주통일 대통령(정권 정당화 요소로 통일담론 활용)
 - 원산 - 금강산 국제관광지대 등 경제개발구 적극 추진(경제적 이익 확보)
 - 전쟁위험 제거, 긴장 완화, 평화적 환경 마련(대외관계 개선)
 -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위상과 입지 제고(지역 질서 변화에 대응)
- 남북관계 개선 의지 표명: “북남관계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야 한다.”
 - “북남 사이의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하여 끊어진 민족적 유대와 혈맥을 잇고 북남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와야”
 - “북과 남이 싸우지 말고 힘을 합쳐 통일의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는 것은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
 - “북과 남은 더 이상 무의미한 언쟁과 별치 않은 문제로 시간과 정력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
 - “우리는 앞으로도 대화와 협상을 실질적으로 진척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
- 남북대화 틀: 조건 충족을 전제로 청와대와의 대화·협상 모색(2014년 태도 지속)
 - “우리는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통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입장이라면 중단된 고위급접촉도 재개할 수 있고 부문별 회담도 할 수 있다”
 -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데 따라 최고위급회담도 못 할 이유가 없습니다.”
 - 통일준비위원회 명의 회담 제의(2014.12.29.)에 대해서는 유보적 태도 시현(추후 다양한 방식의 활용 가능성 시사)
-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 촉구: “자주권과 존엄 침해 책동 단호히 대응·징벌”
 - *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남조선당국은 외세와 함께 벌이는 무모한 군사연습을

비롯한 모든 전쟁책동을 그만두어야 하며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는 길로 발길을 돌려야”

- “상대방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이 벌어지는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신의 있는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고 북남관계가 전진할 수 없다”, “침략적인 외세와 야합하여 동쪽을 반대하는 핵전쟁연습에 매달리는 것은 스스로 화를 불러오는 위험천만한 행위”

- “우리는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그 어떤 도발과 전쟁책동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징벌을 가할 것”(대북 뼈라살포 등 존엄 모독 행위도 포함)

* 통일논의(제도·흡수통일) 거부: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시하면서 체제대결을 추구하지 말며 우리 민족끼리 이념에 따라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 통일문제를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순조롭게 풀어나가야”

-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려 하여서는 언제 가도 조국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대결과 전쟁밖에 가져올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민 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가 가장 우월하지만 결코 그것을 남조선에 강요하지 않으며 강요한 적도 없습니다.”, “북과 남은 이미 합의한 대로 조국통일 문제를 사상과 제도를 초월하여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풀어나가야 합니다.”

- 올해는 고려민주연방제(DFRK) 통일방안(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 발표 35주년

* 통일헌장 제정 반대: “북과 남은 이미 통일의 길에서 7.4공동성명과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10.4선언과 같은 통일헌장, 통일대강을 마련하여 민족의 통일 의지와 기개를 온 세상에 과시하였습니다.”

* 외세공조 배격(우리민족끼리): “남조선당국은 북남 사이의 불신과 갈등을 부추기는 《제도통일》을 추구하지 말아야 하며 상대방의 체제를 모독하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동쪽을 모해하는 불순한 청탁놀음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3. 대외관계: 관계 다변화 모색, 미국의 정책전환 촉구-병진노선 고수

○ 대외관계 기본 방향: “평화를 사랑하고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 인민들과의 유대와 연대성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적극 발전”

- 우리는 혁명적 원칙과 자주 적대에 기초하여 나라의 존엄과 이익을 첫 자리에 놓

고 대외관계를 다각적으로, 주동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갈 것

- 미국의 정책 전환 촉구: “우리 민족을 둘로 갈라놓고 장장 70년간 민족 분렬의 고통을 들썩워온 기본 장본인인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무분별한 침략 책동에 매달리지 말고 대담하게 정책전환을 하여야 할 것”
 - “(지난해) 사회주의의 보루이며 자주와 정의의 성새인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한 미국의 극단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는 긴장 격화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전쟁위험은 더욱 커졌습니다.”
 -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한, 일, EU 등)은 우리의 자위적인 핵억제력을 파괴하고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기도가 실현될 수 없게 되자 비렬한 《인권》소동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 병진노선과 핵억제력 강화 지속: “앞으로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주변 관계구도가 어떻게 바뀌든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압살하려는 적들의 책동이 계속되는 한 선군정치와 병진노선을 변함없이 견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킬 것”
 - “국제무대에서 힘에 의한 강권이 판을 치고 정의와 진리가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가 선군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핵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을 역척같이 다지고 나라의 생명인 국권을 튼튼히 지켜온 것이 얼마나 정당하였는가 하는 것을 뚜렷이 실증”

4. 2015년 남북관계 전망: 큰 틀의 전환 없이 관계개선 착시현상과 긴장 고조 반복?

- 핵심이슈: 핵·미사일 문제, 통일담론(헌장제정 등), 북한주민인권문제, 소니픽처스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미국의 제재 강화 등
- 북한의 통 큰 양보(핵·미사일 활동 유예)나 박근혜 정부의 정책전환과 전략적 대응(정치·군사·평화문제에 대한 대담하고 포괄적인 접근), 미국의 정책 전환 기대 난망
 - * 북한의 핵무기 전력화(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추가 핵실험) 및 재래식 군비강화와 전투력 제고, “단호한 징벌” 등이 정세교란 요인으로 상존
- 남북 당국 및 민간 차원의 각종 회담이나 광복(=조국해방) 70주년 계기 사회문화 교류(이산가족상봉 포함) 등이 이전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나

- * 실질적 성과나 진전, 지속성과 안정성 확보 등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전략적·이벤트성 대화나 교류협력만 활성화될 가능성

사회주의 경제강국과 문명국 건설을 향한 ‘조선속도창조’의 주문을 걸다

정은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1. 2014년 경제·사회 부문 평가

- 군민협동작전으로 사회주의 경제강국과 문명국 건설에서 커다란 전진 이룩
 - 농업과 수산, 과학, 석탄 등 여러 부분에서 생산 증대로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밝은 전망 마련함
 - 건설부문에서 ‘조선속도창조’의 불길로 위성과학자주택지구,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 살림집, 연풍과학자휴양소, 10월 8일공장 등 기념비적 창조물 건설함
 - 앞의 세 개의 건설성과는 10월 10일(조선노동당 창건일)을 목표로 추진됨. 모두 당의 과학중시·인재중시 정책을 선전하기 위한 것임. 10월 8일 공장은 2014년 8월에 완공되었으며 북한의 현대화 산업시설의 본보기 단위이자 군민협동에 의한 건설성과로 손꼽힘
 - * 위성과학자주택지구-2014년 1월 국가과학원 방문했을 때 은정과학지구(장거리로켓 은하 3호 발사 성공 단위)에 한 약속 사항. 발목 수술 후 첫 복귀 무대로 위성과학자주택지구를 방문함. 이때 김정은이 처음으로 김일성처럼 지팡이를 짚고 현지 시찰함.
 -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올린 큰 성과와 전사회적 반향 언급

2. 2015년 경제·사회 부문 계획과 전망

- 과학기술의 선도적 역할과 사회주의 경제강국·문명국 건설을 위한 과업 제시
 - 과학연구 부분에서 최첨단 돌파전을 전개하여 경제발전, 국방력강화,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연구성과를 제시해야 함
 - 이미 마련된 자립경제의 토대와 잠재력을 동원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 건설에서 전환을 이뤄야 함
 - 2015년에 대규모 새로운 투자나 사업을 전개하기보다는 내실화에 주력할 전망
- 인민생활향상의 전변을 일으키는 방법과 과제
 - 농산과 축산, 수산을 3대 축으로 하여 인민들의 먹는 문제 해결과 식생활 수준을 한 단계 높

여야 합

→ 농업부문에서는 물 절약형 농법 도입, 축산부문에서는 기존 시설의 생산 정상화, 수산부문에서는 작년에 군대에서 황금해 이뤘던 성과 본받아 올해 물고기대풍 이어감

- 중앙과 지방 경공업공장들이 함께 생산 정상화되어 질 좋은 소비품, 학용품, 어린이식료품 증산해야 함

* 김정은이 인민생활향상에서도 어린이생활 부문에 특히 신경 쓰고 있는데, 이는 어린 지도자이지만 '인민의 아버지'라는 이미지 제작용을 위해 주력하고 있음을 보여줌. 2015년 1월 1일 현지지도로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방문함

○ 전력문제 해결에 집중하여 선행부문과 중요 공업부문의 침체 극복 노력

- 석탄과 전력생산을 늘리면서 동시에 전기절약 투쟁 전개할 것

○ 10월 대축전장(조선노동당 창건 70돌 기념)을 목표로 완공해야 할 중요 건설대상

- '조선속도창조'로 청천강 계단식발전소, 고산과수농장, 미래과학자거리 등 발전소와 공장, 교육문화시설, 살림집 등 대규모 건설사업 전개

○ 대외경제관계의 다각화와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를 비롯한 경제개발구개발사업 적극 추진

-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2013년 11월 각 도(道)에 외자 유치와 경제 개발을 목적으로 13곳의 경제개발구를 발표했으며, 2014년 7월에 6곳의 경제개발구를 추가로 발표하여 현재 경제개발구는 19곳임. 추가된 6곳은 평양 은정구역(은정첨단기술개발구), 황남 강령군(강령국제녹색시범구), 남포시(와우도수출가공구), 평남 청남구(청남공업개발구), 평남 숙천군(숙천농업개발구), 평북 삭주군(청수관광개발구)임

- 경제개발구 사업은 '선택과 집중' 및 외자 유치 전략을 통한 경제성장 거점 마련과 지역균형 발전을 목표로 함



- 산림복구전투를 전개하여 황금산으로 전변시켜야 함
 - 모든 부문에서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평양시를 포함해 모든 행정 지역과 단위들에서 산림의 정상유지·정상관리 사업 추진

- 제품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고, 모든 공장과 기업소들이 '수입병(輸入病)'을 없애야 함
 - 원료, 자재, 설비의 국산화를 적극 실현해야 함

* <경제연구>(2013년 3호), 손영석의 논문 「생산과 건설에서 질을 높이는 것은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의 중요한 요구」에서 “우리가 생산물과 건설물의 질을 높여 자본주의 나라들을 압도하면 …… 사람들 속에서 다른 나라의 상품을 쳐다보는 현상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언급

-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확립을 위한 사업을 적극 전개할 것
 -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으로 모든 경제기관과 기업체들이 기업활동을 주동적(능동적)으로, 창발적으로 해나가야 함

- 각급 당조직에서도 경제관리방법을 개선하는 사업이 당의 의도대로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

*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은 2012년 6월 28일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확립할 데 대하여'(6.28방침)라는 내부방침이 발표된 데서 기원. 2013년 김정은 제1위원장이 3월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현실 요구에 맞게 우리식의 경제관리방법을 연구 완성할 것”을 지시했다는 북한의 공식보도(<로동신문>2013년 4월 2일)가 나오면서 실체가 확인됨. <조선신보>(2013년 5월 15일)는 2012년부터 일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이 내각의 지도 밑에 독자적으로, 창발적으로 경영관리 하는 새로운 조치들을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밝히며, 이것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지시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명확히 밝힘.

협동농장의 경우 분조관리제 안에서의 포전 담당제를 운영하고, 국가 생산계획을 달성하고 일부 국가에 납부한 후 나머지는 자체 처분(시장판매 가능)하는 것이 골자이며, 공업분야의 경우, 한마디로 경영권한을 현장에 부여하는 것으로 계획수립부터, 생산, 제품과 처분에 대해 기업의 권한을 대폭 확대함. 여기에는 근로자 개인당 임금의 상한 규제가 없어지고, 제품의 가격 제정 자율권까지 포함됨. 한마디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 및 농장의 분권 및 자율성의 확대와 경쟁 강화의 조치라 할 수 있음

-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을 위해 교육, 체육, 보건, 문예 사업 강조

- 국가적, 사회적 관심을 높여 새 세기 교육혁명 추진하여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인재강국화 실현

- 체육강국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침체된 문학예술 부문의 사업을 강화하고, 의약품 생산을 늘려야 함

- 민족유산 보호사업을 전국가적, 전인민적 애국사업으로 전개해야 함(새롭게 언급된 사항)

* '문명국' 용어는 2014년 신년사에서는 한번도 사용되지 않았으며, 올해 신년사에서는 3회 언급됨. 김일성 시대에 인민생활향상의 목표가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에서 사는 것'이었다면, 김정은 시대에는 '문명국'이라는 더 높은 수준의 목표가 제시됨